

# 전남도,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

### 열악 재정 극복 세원 발굴...석화산단 석유정제·저장시설 등에 과세 여당과 면담서 입법 건의...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도 '속도'

전남도가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신규 세원 발굴에 나섰다. 가장 먼저 검토되고 있는 것이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다. 전남도는 과세 입법에 나서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 과세 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회와 협력을 통해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다. 외부불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활동이나 경제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효과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과 유사한 상황인 울산, 충남 등 지자체와 협업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지

난 2월 울산시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재난 관리와 환경보호·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건의문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화학물질 신규 과세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대표로 과세 타당성 주제 발제를 중 앙부처 공감을 끌어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월 국회의원 당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 면담에 이어 6월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기현 국회의원 대표는 "위험시설 등 입지지역에 대한 외부불경제 요소 해소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남도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전남도의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건의 노력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경영 부담과 물가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전국 이슈화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김 지사는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과세 입법이 통과되면 연간 약 6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울산·충남 등 관련 사·도와 연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 자주재원을 확충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정당 현수막 규제' 행안부서 제동 "상위법 위배" 공문...시 "보행자 안전 위해 필요"

광주시가 도심에 어지럽히고 있는 정당 현수막 남립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 위배' 논란을 겪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30m 이내 현수막, 신호기·도로표지·가로등·가로수 등에 연결해 설치된 현수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 도로변에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마다 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하도록 하고 5·18 평화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는 표기할 수 없다. 위반 시 강제 철거,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르면 8월 28일~9월 6일 제319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를 상정하고, 현수막 계시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갑자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시의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에서 위법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자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관련 사항

이나 별칙을 정할 때는 상위법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기하면 별도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과태료 규정까지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도 지난 5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정당 현수막 4개 이하 제한,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행안부가 상위법 위법이 없는 위법한 조례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 5조 금지광고물 조항이 신호기나 소방시설을 가리는 경우, 색깔 등이 비슷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 교통수단과 이용자 안전을 해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어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로 교차로에 정당 현수막이 많이 게시돼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등 안전사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는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산·학·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물산업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천연물산업 발전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시장 선도 방안 마련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 제공>

## “전남을 천연물 산업 거점으로”

### ‘천연물산업발전협’ 출범...신사업·공모사업 유치 방안 등 논의

전남을 천연물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천연물산업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천연물산업 발전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시장 선도 방안 마련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출범식에는 ㈜바이오프디엔씨, ㈜비엔텍, 엔피케이㈜ 등 천연물 관련 기업, 조선탄, 목포대, 순천대,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바이오헌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등 산·학·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한 천연물산업발전협의회는 천연물을 중심으로 전남 그린바이오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기간 간 정보 공유와 유기적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역할을 하게 된다.

협의회에서는 또 전남 천연물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중인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공모사업 대응전략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천연물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천연물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국 유일 천연물 전주기 산업화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공모 사업을 유치해 천연물 표준화를 통한 산업화 기간 단축, 연구개발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 먹거리 산업인 천연물 시장 선도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물자원이 자생하는 천연물의 보고인 반면, 전국 유일 전주기 산업화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천연물 산업의 중심지"라며 "전남을 천연물산업의 국제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보령 머드축제서 전국체전 홍보

전남도가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알리기에 적극적이다.

전남도는 최근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린 제 26회 보령머드축제 현장을 찾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남도는 지난 22일까지 열린 머드축제 기간 축제장을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해 100만여명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행사장 분위기에 맞는 물놀이 튜브, 수영 방수가방, 수건, 부채 등 여름나기 체전 홍보 물품을 나눠주는가 하면, 전국체전 홍보영상 송출, 체전 상징물을 활용한 현수막과 배너, 백드롭 게시 등을 통해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전국체전 개최지를 알리면서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전 카드리 배어로서의 기념 촬영, 톨렛 돌리기, 누리소통망(SNS) 인증샷 올리기 등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한편,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제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을 끌었다.

전국체전 개최지를 알리면서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전 카드리 배어로서의 기념 촬영, 톨렛 돌리기, 누리소통망(SNS) 인증샷 올리기 등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한편,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제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어선 입·출항 위해 어항내 소통구 설치 필요”

#### 정길수 도의원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정길수(민주·무안 1) 전남도위원은 지난 19일 제 373회 임시회 기간중 열린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어항 퇴적예방사업'의 시·군비 부담을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어항 퇴적예방사업은 어선의 입·출항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항 내 퇴적토를 준설하거나 해수 소통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시·군비 부담률이 70%로 높아 열악한 재정 형편에 놓인 기초자치단체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면서 "대승

적 차원에서 도비 부담률을 높이거나 해양수산부에 건의, 국비 지원을 받아 열악한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항 퇴적예방사업'은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어항, 정주어항, 소규모어항을 대상으로 매년 6~10개소의 어항을 선정하여 어항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6개 시·군 8개소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제한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